

보도자료

보도일시	2020년 9월 17일(목) 13:30
담당자	양용현 KDI 시장정책연구부장 (044-550-4141, yangyh@kdi.re.kr)
배포일시	2020년 9월 16일(수) 14:00
배포부서	KDI 홍보팀(044-550-4030, press@kdi.re.kr)

기업부문의 이중구조 해소 방안 모색

국민경제자문회의-KDI 공동 정책포럼 온라인 개최

- 일 시: 9월 17일(목) 13:30~16:00
- 주 최: 국민경제자문회의 · K D I

-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와 KDI는 9월 17일 공동으로 '한국 기업부문의 이중구조, 현재와 미래' 정책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
 -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속 국내 기업 간 생산성 양극화와 이중구조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기업 성장은 정체되고, 역동성도 저하되고 있어 '기업부문 이중구조 해소'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
 - 이번 정책포럼은 국내 기업의 이중구조 현황과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, 향후 예상되는 기업생태계 변화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

-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“코로나19 위기로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불평등 문제가 심화될 것”이라고 밝히며 “한자어 위기(危機)는 원래 위중기(危中機)의 준말로 위기를 기회로 잡아 장기적인 구조 개혁을 할 수도 있을 것”이라고 말함.
-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에서 “대·중소기업 간 구조적 불균형은 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.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미래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활력 있는 경제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”라고 밝힘.
- 최정표 KDI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“한국 경제는 기업부문, 노동시장, 교육, 창업 등 전반에 걸쳐 역동성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”라고 평가하며 “기업부문 이중구조를 완화하지 않고는 경제 역동성을 제고할 수 없을 것”이라고 강조
- 정책포럼은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, 양용현 KDI 시장정책연구부장 두 명의 전문가 발표에 이어 패널·자유 토론으로 진행
-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은 국내 대기업-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은 R&D 투자 불균형, 우수인재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혁신역량의 불균등 발전에 기인한다고 밝히며
 - 미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‘New Ownership Plan’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, 중소기업 미래성과공유제 등 우수인력 유인체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
- 이어진 두 번째 발제에서는 양용현 KDI 시장정책연구부장이 공정경제의 일환으로 거래상 지위 남용 억제방안, 상생협력 촉진방안을 도입해왔으나 정부 개입의 한계로 이중구조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했다고 지적하며

- 공정한 거래가격 유도를 위해서는 조정성립률을 제고하고, 공동교섭을 조건부 허용해 중소기업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는 한편, 기술 유용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피고에게 반증책임을 부여해 신고 유인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
- 이번 포럼은 당초 오프라인 행사로 계획되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실시간 웨비나(웹 세미나) 방식으로 개최되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, 사후에는 현장 영상을 인터넷과 페이스북을 통해 배포할 예정으로 언택트 행사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
- 특히 행사 전, 대국민 소통을 위해 KDI 및 국민경제자문회의 홈페이지, KDI 페이스북을 통해 ‘국민의견 청취 이벤트’를 진행해 기업부문 이중 구조 이슈에 관한 의견을 수렴,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자유토론에서 논의하는 새로운 방식의 운영 모델을 제시함.
- 한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번 정책포럼이 제3기 출범 첫 공식행사이며, KDI와의 웨비나 공동 개최를 시작으로 앞으로 국책연구원과 보다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.

- ❖ 첨부 1. 세부 일정
- ❖ 첨부 2. 연사 프로필
- ❖ 첨부 3. 발표 요약문
- ❖ 별첨. 발표 자료

❖ 첨부 1. 세부 일정

시 간	프로그램
14:00~14:10	<p>개회식</p> <p>개회사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</p> <p>축사 정세균 국무총리</p> <p>환영사 최정표 KDI 원장</p>
14:10-15:18	<p>사회 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(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)</p> <p>발표 1.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제약 및 개선 방안 이병현 중소기업연구원장</p> <p>발표 2. 대기업-중소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 제고 방안 양용현 KDI 시장정책연구부장</p> <p>토론 김진방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(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)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소장 안상훈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(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)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(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)</p>
15:18-15:58	자유토론
15:58-16:00	<p>총평</p> <p>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</p>

❖ 첨부 2. 연사 프로필

기업부문 이중구조 현실과 정책과제

이근 서울대학교 교수(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)



- 現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
- 現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
- 前 국제숭페터학회 회장
- 前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장

발 표 1.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제약 및 개선 방안

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



- 現 중소기업연구원 원장
- 現 한국전략경영학회 회장
- 現 광운대학교 경영대학 교수
- 前 기술경영경제학회 회장
- 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조교수

발 표 2. 대기업-중소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 제고 방안

양용현 KDI 시장정책연구부장



- 現 KDI 시장정책연구부장
- 現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
- 前 KDI 규제연구센터 제도연구실장

토 론

김진방 인하대학교 교수(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)



- 現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
- 現 동반성장위원회 위원
- 前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
- 前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

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소장



- 現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소장
- 前 KDI 연구위원
- 前 기획재정부 핵심사업평가 평가위원
- 前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중소기업분과 분과위원장
- 前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 존치평가위원
- 前 기획재정부 국가보조사업 운용평가위원

토 론

안상훈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(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)



- 現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
- 前 기획재정부 부총리 자문관
- 前 OECD 선임이코노미스트
- 前 KDI 경영지원본부장
- 前 KDI 산업·경쟁정책연구부장
- 前 세계은행 자문관

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(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)



- 現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
- 前 비판사회학회장
- 前 서울특별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
- 前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

❖ 첨부 3. 발표 요약문

발표 1.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제약 및 개선 방안

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

- 우리나라는 대기업-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이 존재하며,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혁신역량의 불균등 발전에서 기인
 -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은 대기업 대비 55.1% 수준에 불과하며, 최근 대기업-중소기업 간 연구개발비 격차가 심화되는 추세
 - 중소기업은 국내 시장 중심의 경영으로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, 우수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
-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'미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'이 필수적
 - 중소기업 생태계의 시스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'New Ownership Plan'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투명성 확보
 - 중소기업 미래성과공유제 등 우수인력 유인체계 활성화
 - 중소기업 CEO 대상의 인식개선교육, 중소기업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질 제고 등 중소기업 직업 교육·훈련 강화 필요

발표 2. 대기업-중소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 제고 방안

양용현 KDI 시장정책연구부장

- 공정경제의 일환으로 거래상 지위 남용 억제방안, 상생협력 촉진방안을 도입해왔으나, 이중구조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함.
 - 납품단가의 공정성 제고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,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없는 정부 개입의 한계를 노정
- 공정한 거래가격 유도를 위해서는 조정 성립률을 제고해야 하며, 공동교섭을 조건부 허용하여 중소기업 협상력을 높여주어야 함.
 - 조정은 정부 개입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이므로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, 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해서는 조정 실패 건에 대한 정부의 조사·결정 절차가 합의 유인을 높이도록 설계될 필요
 - 공동교섭은 기(既) 논의된 바 있으나 납품단가와 최종재 가격을 상승시킬 우려로 인해 도입되지 못했는데, 최종재 마진 배분 협상을 의무화하면 후생손실 없이 협상력 제고 가능
- 또한 기술유용 적발률이 아직 낮으므로,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피고에게 반증책임을 부여해 신고 유인을 높일 필요
 - 최대 손해배상배수는 10배 이상으로 높이되, 신고 기피도와 입증 난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배수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